

일반 논문

6월 항쟁과 문학장의 민주화

해금 전후(사)의 역사 인식과 항쟁 이후의 문학(론)

허민 _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논문 요약

이 글은 '해금(1988)'이라는 조치의 성격을 '문학장의 민주화'라는 역사적이면서도 문화사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 것이다. 이때 '문학장의 민주화'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의식 및 정서, 기대 지평의 확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해금 및 검열 폐지, 출판 자유화, 문예지 복간 등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는 소설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변혁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물론 문학장 민주화의 제도적 성취는 소설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의 해방과 확장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해금은 금지된 작품과 작가를 복원해준 계기이면서도, 바로 그러한 금서들이 담지하고 있던 문학의 불온한 정치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해금은 해금 전후 시기의 냉전 이데올로기의 해체 및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의 전환, 한반도 정치 지형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던 증충적 성격의 조치였다. 하지만 해금 조치 당시의 이 제도적 완화에는 사상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있었다. '과거 문학', '외국 문학', '북한 문학'에 대한 다소간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면서도 동시기 국내 문인의 예술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탄압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DOI: <http://dx.doi.org/10.31008/MV.41.6>

이는 해금이라는 조치가 역사와 문학의 복원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당대 문인들은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해금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변화의 계기를 실제 문학 지형의 전환이자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으로 의미화하려는 담론적-이론적 실천을 수행하기도 했다. ‘항쟁 이후의 문학(론)’이 바로 그것이다. 항쟁 이후의 문학(론)은 해금으로 대표되는 문학장 민주화의 제도적 성취를 소설 변혁의 계기이자 문학장의 재편 가능성으로 사유하려고 했던 당대 문단의 의식적 논쟁이자 논의였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해금이라는 제도적인 성취가 ‘항쟁 이후의 문학론’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포착하고, 그렇게 가능해진 새로운 문학적 인식이 실제 문학사 서술의 구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항쟁 이후’라는 시간의 중층적 성격과 그 속에서 모색되고 있던 문학장 재편 양상의 일단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어: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해금, 문학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의 문학론

1. ‘항쟁 이후’라는 시간과 ‘문학장의 민주화’

『창작과비평』의 복간(1988)은 ‘나라 안팎으로 입은 은덕’에 ‘옷깃을 여미며’ 시작한다. 계간지의 ‘8년 만의 부활’은 분명 “6월 항쟁의 열매”이기에, 그 대가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슴이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권두언). 복간호에서 백낙청은 6월 항쟁 이후의 국면을 “민족 문학·민족운동이 바야흐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6월 항쟁은 그곳에서 표출된 구호(호헌 철폐, ‘독재 타도’)보다 “저변의 민중 생존권 투쟁

과 민족의 자주 통일 의지가 더 중요한 동력”이었고, “7·8월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의 급격한 신장이야말로 6월의 성취를 능히 지켜내고 키워나갈 주체의 대두”로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백낙청 1988, 223-224). 같은 지면에 마련된 좌담 ‘민족 문학과 민중문학’에서는 바로 이 ‘새 단계’에 대한 이견으로부터 논쟁이 촉발했다. 1970년대 민족 문학론을 주도했던 ‘소시민 계급은 몰락’하고, 새로운 ‘생산 대중에 근거한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이라는 주장(김명인)이 있는 반면, 당대 한국사회가 그 토대에 있어 자본의 헤게모니가 유지-강화되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임영일)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최원식 외 1988, 13-15). 한편 『문학과 사회』는 복간호 특집으로 “사회 변화와 문학적 인식”을 내세우며, 「전환기의 문학과 사회」의 과제로 “해석과 변혁의 통일”을 주창하기도 했다(성민엽 1988, 31). 『실천문학』 역시 “오늘의 정치 현실과 문학” 좌담을 통해 “민중문학의 이상적 형태”를 내세우기보다는 “현 단계의 수준과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문학이 자기의 위치를 다지고 굳혀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최장집 외 1988, 290).

이처럼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시간’은 한국사회의 ‘새 단계’이자 ‘전환기’로 호명되고 있었다. 물론 ‘새 단계’라는 인식과 ‘전환기’라는 분석 사이에는 정세에 대한 다소 다른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¹⁾ 하지만 분명, 이 ‘항쟁 이후’라는 시간은 한국사회 변혁의 ‘분기’이자 그 ‘과정’

1) 전자가 주로 민족 문학의 새로운 주체의 등장과 그 성격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한국사회의 토대에 관한 진단에 입각해 있다. 아울러 ‘새 단계’와 ‘전환기’라는 규정의 의미가 논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착종되어 있기도 했다는 것을 짚어 둘 필요도 있다.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테면 「한겨레」에서는 6월 항쟁 1주년을 기념하며 “전환기의 한국문화”라는 특집 기사를 연재하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 ‘민족 문화 운동의 성장기’를 거쳐 6월 항쟁 이후 ‘새로운 전환의 시간을 맞이했다’는 역사 인식에 기초한 기획 시리즈였다. 여기서는 한국문화의 전반, 구체적으로는 문학, 영화(영상), 출판, 학술, 미술, 춤, 음악, 과학 등의 영역에서 보이는 변화 양상을 살피며, 변혁에의 기대와 주체적인 전망을 논하고 있었다(한겨레 1988/5/15 - 1988/7/16).

항쟁 이후라는 시간은 한국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기대가 걸린 만큼 중층적인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 6월 항쟁은 우선 1980년 5월 광주의 바람이 전국적·전 민중적 차원에서 확장·표현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 ‘이후의 시간’은 단지 ‘직선제 쟁취’와 ‘선거 패배’라는 결과로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할 수 없었다. 항쟁 이후라는 시간은 군부 독재의 억압과 자본의 헤게모니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유지되고 있는 국면이면서도, 그에 대한 저항 속에서 문화적인 기념비들이 창출되고 있던 역사의 연속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항쟁 이후라는 시간은 항쟁으로 가능해진 것을 미래에 투사한 현재 의식인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전망을 다시 떠맡는 지평의 열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당대를 살아가는 대기한 주체들은 환희와 실망, 기대와 좌절을 교차·통과하며, 항쟁 이후라는 시간을 각자의 관점에서 역사화하기에 전념했던 것이다.

문학계에서 역시 ‘항쟁 이후의 문학(론)’이 주창되고 있었다. 그러나 항쟁 이후의 문학론 자체가 6월 항쟁으로 쟁취된 ‘민주화의 바람’이 문학의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었기에 가능한 논의였다. 일종의 ‘문학장의 민주화’라 칭할만한 변혁의 토대이자 그로부터 비롯된 해방의 정서가 마련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쟁 이후라는 시간 속에서 형성된 ‘문학장의 민주화’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학장의 민주화’란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규제 및 제재 완화를 의미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의식 및 정서, 기대 지평의 변혁과 확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검열 폐지 및 출판 자유화, 표현과 사상의 자유,²⁾ 문예지 공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면, 후자는 다소 복잡한 양상들로 나타난다. 이는 한편으론 소설의 형식 및 구성의 변혁으로 나타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재현 가능한 것의 확장’과, ‘문학적 주체의 다기한 형상’과 같은 내용 차원의 내포를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해방문학’과 ‘민중적 민족 문학론’ 진영에서 집중 조명된 노동자 문학의 형식적 다양성과 복합성이 소설 형식의 새로운 지평³⁾을 열었다면, ‘재현 가능한 것의 확장’이나 ‘문학적 주체의 다기한 형상들’은 주로 당대 소설의 정치성 문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⁴⁾

2) 헌법 제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3) 장성규의 일련의 논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를테면, 그는 『노동해방문학』은 관습화된 엘리트층적 문학 개념을 위반하기 위해 지배적 문화양식의 급진적 패러디와 기호의 재배치 전략 등을 활용했으며, 동시에 사노맹이 지니는 조직적 특성을 활용해 하나의 텍스트를 다층적 장에 적합하게 재배치-유통하는 전략을 활용했다는 논의를 한 바 있다(장성규 2014). 또한 최근에는 민중적 민중 문학론의 생산-유통-향유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새로운 텍스트 개념 확장 문제를 다룬 바 있다(장성규 2018).

4) 문학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그를 바탕으로 비롯된 소설의 변혁을 ‘문학장의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총칭하는 데는 다소간 위험이 따르기도 할 것이다. 우선 ‘민주화’라는 표현 자체가

문학장의 민주화라는 제도적인 성취는 소설의 형식과 내용적인 차원에서 해방과 확장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문학장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해금’이 어떠한 역사의식 속에서 쟁취된 것인지를 개괄하고, 바로 그러한 해금이 (일종의) 계기가 되어 촉발된 항쟁 이후의 문학(론)과 소설적 주체의 확장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려 한다. 뒤에 상세히 논하겠지만, 해금은 항쟁 이후라는 시간을 역사화할 수 있는 문학적인 차원에서 수행된 민주적 성과였다. 즉 해금은 금지된 작품과 작가를 복원해준 계기이면서도, 바로 그러한 금서들이 담지하고 있던 문학의 불온한 정치성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반복컨대 6월 항쟁 이후 소설의 정치성은 해금과 검열 폐지 등과 같은 문학장 민주화의 제도적인 성과를 토대로 논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해금의 과정과 더불어, 그로 인해 가능해진 복원의 의미와 그 문화사적 지평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해금이라는 제도적인 성취가 항쟁 이후의 문학론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포착하고, 그렇게 가능해진 새로운 문학적 인식이 실제 문학사 서술의 구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려 한다.

한국의 담론장에서 상당히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왔기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민주화’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6월 항쟁 이후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 영역에서의 변화를 ‘민주화’라고 지칭했던 당대적인 의지와 맥락에 입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방송의 민주화’, ‘출판의 민주화’라고 불리던 당시의 현상은 ‘문학장의 민주화’라고 본고에서 지칭하는 현상과 상당히 호응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관계성 또한, 고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문학의 급진화’와 병진된 것이자, 그 과정을 둘러싼 민족·민중문학 진영의 재편과 쟁론 모두를 ‘문학장의 민주화’의 구체적 양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임 밝혀두는 바이다.

2. 해금 전후의 역사 인식과 그 문화사적 지평

1) 복원의 의미

박완서의 소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는 한국 전쟁 당시 서울 수복 기간 동안 좌익으로 몰려 사형당한 작가의 복원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월·남북 문인 작품이 해금되자, '6·29 전에는 꿈도 못 꿀 책들이 쏟아져 나와 베스트셀러를 다투던 시기'의 일이었다.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 박태원 등, 북으로 간 문인들의 이름이 비로소 복자(伏字)로 결손 되지 않은 온전한 이름을 내걸 수 있었고, 월·남북 문인들의 선집과 전집 출판이 붐을 이루었다. 소설가인 주인공-화자는 한때의 은사였던 송사묵 선생의 이름이 '현대문학사'에서 '가볍지 않은 비중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안도해했다. 그에 따르면 송사묵은 해방을 전후한 십여 년 동안 '그다지 재미는 없지만 씹을 맛있는 소설을 꾸준히 발표해온 소설가'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송사묵 선생이 월·남북 문인 선집에 포함되는 것에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낀다. 송사묵 선생은 월북도 납북도 아닌 남한에서 죽은 사형수였기 때문이다.

해방 전후 시기에 활동한 작가의 '진상'은 분명 '월북'이나 '남북'이란 이름으로는 온전히 해명될 수 없기 마련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월·남북 문인이라는 규정 자체가 이미 냉전적인 사고에 입각한 호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이 느낀 미묘한 불편은, 6월 항쟁

이후 정당하게 쟁취한 “해방의 무드” 속에서 “진정한 복원”의 불가능성을 감지한 자의 반응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송사묵 선생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전집을 출판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그를 향한 편지글을 부탁해 온다. 송사묵의 아들 역시 그가 납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편지글의 첫 문장은 “북쪽에 계신…”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저승에 계신…”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이 갈림길에서 그녀는 주인공에 대한 역사·전기적인 사실을 온전히 전달해야겠다는 (일종의) 사명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이를 증명해줄 증언자들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복원해줄 증언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의도된 망각이자 오인에 가까웠다. 6·25를 만나 동네 민청에 나간 게 화근이 되어 ‘감옥살이’를 했던 동창 혜진은 자신의 잊힌 이력이 불거질까 두려워 대화를 거부했고, ‘송사묵을 키웠다’고 자부했던 ‘문공 문교 계통 관직’ 출신 백민세웅 역시 그가 납북된 것으로 말하고 있었다. 6월 항쟁 이후에도 남한에서 ‘북한군의 부역자’이자, ‘빨갱이’로 규정된 자들의 비참한 운명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인의 좌익 전력에 대한 증언은 그와의 ‘공모’를 진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5) ‘빨갱이 가족’의 말로도 마찬

5) 이선미는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1987년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를 아니라 1970년대의 냉전 질서와 반공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반공주의에 통제되어온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부정한 권력과 강제된 공모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이 민주화의 의미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 말한다. 박완서의 1970년대 소설은 1987년 이후에 비로소 드러난 1970년대 서사의 총체를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이선미 2014).

가지였다. 그렇기에 증언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빨갱이’와 가까운 자일수록, 진실은 은폐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제 남은 방법은 주인공이 직접 가족에게 송사묵의 죽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러므로,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막내 동생 되는 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네에, 그거요. 납치당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 말이죠. 그건 우리 식구의 말버릇이죠. 사형이나 옥사보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박완서 1989, 170)

남한에서 사형당한 송사묵은 가족들의 ‘말버릇’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여전히 아득한 ‘금지된 영역’에서였다. 물론 이 ‘말버릇’ 혹은 ‘묵계’는 그들이 창안한 것은 아니었다. “언제부터인지 북쪽으로 간 사람들의 문화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아버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을 보고” 그들 식구는 단지 동조했을 뿐이었다. 주지하듯 6월 항쟁은 직선제를 쟁취했고, 문화적으로도 월·남북 작가 해금을 비롯하여 언론 및 방송의 민주화와 자유화,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교류 등을 이루어 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의 기운 이면에는 여전히 말해지거나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언급될 수 없고, 잊거나 오인하는 것을 통해서만 지시되는 현실의 논리가 엄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현실의 논리’란 반공 이데올로기 및 냉전 질서, 분단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일상적 삶’ 전반을 의미한다. 박

완서는 결국 이것을 묻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혹은 달라질 수 있는가? 모두의 일상적인 삶, 내면화된 망각과 신체화된 과거로부터 해방의 길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증언의 불가능성’이 바로 ‘복원의 불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송사묵의 진실을 밝히려는 주인공-화자의 저 의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녀는 다만 죽은 송사묵을 위해서도, 살아남은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온전한 문학사 서술을 위해서만도 행동한 것 같진 않다. 오히려 그녀의 의지는 복원되어야 한다고 간주되는 ‘역사적인 사실(혹은 진실)’ 자체의 성격과 의미를 강하게 심문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인 조건과 국면마다 그 성격이 상이하게 변화하는 ‘사실의 영역’ 속에서 복원 가능성의 조건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어쩌면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항쟁 이후의 삶은 복원의 조건들이 탐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혁적인 전망을 담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한다.⁶⁾ 해금의 의미도 여기서부

6) 복원이란 회복일까?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토론이 있어 짚어두고자 한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비평』에서는 ‘87년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 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은 87년 체제 성립의 시점에서 ‘민주화’란 유신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철저히 선거 정치의 역동성과 관련하여 그렇다는 것인데, 87년 헌법 제정에 참여한 인사들(특히 YS와 DJ조차)은 제3공화국 선거의 역동성(1963년의 대선과 1971년 대선에서의 박정희의 신승)을 기억하며, 1987년 6월 항쟁의 요구를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제한된 의미에서만 받아들였고, 실제 87년 체제의 헌법 제정 역시 그런 의미에서만 성립하여 5·16 이후 만들어진 헌법에 기초한 것이었음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천정환(성균관대 국문학)은 당시 마련된 헌법체계에 있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할지라도 당대를 보는 이런 관점 자체가 너무 ‘위로부터의’ 역사 인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이면서, 문화정치적 관점으로 당대를 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원택 외 2017).

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금이라는 사건은 분명 문학사 복원의 계기이면서도 금지되었던 삶과 삶이 다시 생명을 부여받는 전혀 다른 지평의 열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해금으로 대변되는 복원이란, 과거의 것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반대로 해금은 해금된 것과 해금되지 못한 것의 경계를 다시 표시하고, 바로 그러한 경계 위에서 소설의 미래를 모색하거나 상상케 하는 정치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다. 복원은 과거를 회복하고 미래를 겨냥한 문학장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성취였다. 그리하여 해금의 역사적 맥락과 구체적 실상, 그리고 해금 조치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여러 사회·문화적 혼란의 문제가 항쟁 이후를 살피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2) 해금 전후(사)의 역사 인식: '월북 작가'를 호명하는 다기한 주체와 논쟁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79년 1권이 발간된 이후 1989년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 현대사 연구의 큰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역사학과 문학, 철학 및 사회학, 정치학, 예술학을 전공한 (당시 기준) 신·중진 연구자 60명이 참여한 이 저작은 식민사관과 냉전적 역사 인식을 탈피하고, 지배계급의 역사가 아닌 민중사관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특히 '분단 지향적 현대사'에서 벗어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내용을 전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런데 총 6권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발간

되는 과정에서 최초 집필진과 이후 집필진 사이에서 약간의(?) 역사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정확히는 1~3권과 4~6권 사이의 변화인데, 이중 후자의 책들은 1989년에 집중적으로 출간된 것이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1, 2, 3을 통해 우리는 일부 지배계급의 역사가 더 이상 정사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민중사관의 확립과정이었다. 그러나 반쪽 민중의 역사 역시 통일 민족의 정사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통일민족의 정사에 합당한 연구범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단순히 대항적 시각이 아닌, 보다 균형 잡힌 대안적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단과 전쟁, 전쟁과 분단의 8년사를 하나의 역사 위에 놓고 볼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확보하고 북한 지역을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올바른 시·공간적 구분에 입각하고 엄밀한 민족적 시각이 견지되도록 함으로써 통일민족의 정사로서의 내용성을 채워내고자 하였다(최장집 외 1989, 590).

7) 한겨레에서는 창간 30돌을 맞아 “책으로 본 한국사회 30년”이라는 특별기획 기사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끈 책 30권을 학자와 평론가, 작가, 출판인 등 출판·문학계 전문가 30인이 선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역사 인식의 전환이라는 이유에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저작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의 선택을 받았다. 총 30명 중 16명이 이 책을 꼽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 책이 당대 학계만이 아니라 대중 차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한겨레 2018/5/30).

『해방 전후사의 인식』발간 과정에서의 변화는 ‘해방 3년사’에서 ‘해방 8년사’로의 전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해방 3년사(또는 해방 5년사)’와 ‘한국 전쟁’ 두 기간으로 나누어 파악되던 시기가 ‘해방 8년사’란 이름으로 통합된 것이다. ‘해방 8년사’는 “해방 정국의 혁명과 반혁명의 갈등이 한국전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분단으로 고착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연속된 기간”(최장집·정해구 1989, 12)이라는 역사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는 해방과 전쟁, 분단을 하나의 역사 위에 놓고 보는 시간적 범위를 확보한 것임과 동시에 북한이라는 금지되었던 지역을 포괄하는 공간적 범위를 확보함으로써 ‘통일민족의 정사’를 서술하려는 기획이 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는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역사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은 그 민중적·민족적·통일적 관점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⁸⁾ 물론 역사 인식의 전환 및 강화의 과정에는 남북대화의 모색과 북방정책의 시발점이 된 노태우 정권의 7·7선언이 또 다른 배경으로 작동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 1987년 민주화의 성과였으며, 학계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통일적 관점을 확립하려는 연구가 심화되고 있었다.

8) 박명림은 1980년대 역사 인식의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하면서도, 이시기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살피고 있었다. ① 부르주아 분류 사관의 잔존 및 냉전적-이데올로기적 인식 ② 과도한 연역적-관점주의적 접근과 이와 반대되는 실증주의적-행태주의적 방법론 ③ 연구 시기 및 범위의 분절 (해방 3년, 한국전쟁의 분절적 인식 및 남한과 북한의 분리 및 전자에의 집중)이 그것이다. 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중적-민족적 관점의 확보/일국적-통일적-전체적 관점의 확보/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의 균형적인 접근/실증적 접근법, 실증적 방법론 요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박명림 1989, 9-11).

해금의 배경에도 이런 역사 인식의 변동이 선재해 있었다. 주지하듯 해금은 체제경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한 정부의 시혜적인 조치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당대의 연구자와 출판인, 시민사회의 요구와 건의, 투쟁이 얻어낸 쟁취이기도 했다. 1988년 7월 19일, 월·납북 문인들의 해방 전 문학 작품에 대한 해금 조치가 단행된다. 그러나 이 해금 조치는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크게 보면 이전에도 1976년 3·13 조치(해방 전, 순수문학으로 생존해 있지 않은 월·재북 문인 연구 허용)와 1987년 10·19조치(월·재북 문인 논의 허용 및 상업 출판 허용) 등이 있었다. 즉 해금은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⁹⁾ 월북 문인의 작품만이 아니라, 이념도서를 비롯한 금서로 범위를 확장하면, 해금의 과정이 더 세밀히 보인다. 정부

9) 이봉범은 1988년 해금에 이르는 과정에서 문학예술 분야의 월·납북 문제가 정치권력의 통제 이상으로 내부 대립의 수단으로 변질, 활용되면서 규율 기제로 작동한 역사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하여 해금의 단계마다 작동했던 냉전체제의 거시적 변동과 규율의 양상을 살피고, 월·납북 의제가 내장하고 있는 문화정치의 논리와 양상을 역사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이봉범 2017).

참고로 이봉범의 위의 연구를 제외하면 해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해금 30주년이 된 2018년 관련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철호는 해금 이후 1990년대 학술장의 변동에 대해 ① 내발론과의 단절 ② 카프 문학 연구자들의 시각 전도(모더니즘의 발견) ③ 미적 근대성의 한 기원인 감각적 인간의 출현 포착으로 논한 바 있다(이철호 2018). 장문석은 해금을 전후한 시기(1985~1989)의 월북작가 작품집 출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했다(장문석 2018).

이 논문은 이들 선행연구의 탁월한 성취를 받아들이면서, 해금이라는 조치의 성격과 구체적 의미 및 기능을 문학장의 민주화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의 연구가 해금이라는 조치의 실제 귀결에 주목한 것과는 달리, 6월 항쟁으로 인해 가능해진 해금이, 그러한 조치의 시행 전후에 어떠한 역사적이면서도 문학사적인 인식의 변혁 속에서 쟁취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논문은 해금의 배경 속에서 오히려 해금 자체가 함의할 수 있는 문학·정치적 지평을 가능한 열어놓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한 것임을 밝혀둔다.

는 1982년 2월 마르크스 평전인 이사야 별린의 『칼 마르크스-그의 생애, 그의 시대』(명민사)의 시판을 허용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두 달 후에는 『소련공산당사』 등 15종이 추가로 출판되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1986년에 공식적으로 번역출판이 허용된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의 일환이라고 선전되었으나,¹⁰⁾ 그 이면에는 민주화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교육지책이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해금의 과정 동안 정부는 금서에 대한 탄압과 제재를 병행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적지 않은 출판인 및 연구자가 구속되었으며, 금서를 판매한 서점의 주인들도 불법 연행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1985년 5월에는 서울대 앞 광장서적에서 영장 없이 665권의 도서를 압수한 ‘이념도서 파동’이 있기도 했다. 그에 대해 출판인들은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출판 탄압에 거세게 저항하기도 한다(이두영 2015, 379).¹¹⁾

1988년의 해금은 세부적으로 보면 대략 네 가지 종류의 작품군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1) 월·납북 문인 작품 (2) 국적 문제나 정치적 이유

10) 서울대에서는 1983년 1학기부터 사회주의와 제3세계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기도 한다. 이는 금서 해제를 잇는 사건으로 주목받았는데, 개설 명목은 대학생들의 역사 인식의 올바른 확립에 있었다. 즉 ‘교과서적 반공의식’과 ‘간헐적 반공체험’에 속에서 자란 분단 상황 속 세대에게 안보와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조치는 그 애초의 목적을 벗어난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83/2/7).

11) 참고로 이 책에 따르면 5.6공화국 통치 기간 동안 구속된 출판인은 110명, 판금 압수된 서적이 1,300여 종에 약 300만 부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서점 주인이 불법연행된 사례는 5공화국에서만 48건이고, 16명은 구류, 입건 처분은 6명이라고 한다. 1986년 5월 1일부터 1987년 6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68개 서점에 대해 총 126여 회의 불법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모두 6천여 부의 서적이 압수되었다고 한다.

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해외 동포 문인들의 문제작 (3) 공산권 현대 문학의 번역 (4) 정치(풍자) 작품들이 그것이다(한겨레 1988/12/6). 해금은 냉전 논리에 입각한 ‘사상의 벽’을 허문 것이자, 분단 극복의 주요 성과로 인식되었다. 문학사적으로는 일단 ‘1920~30년대 카프 문학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동아일보 1988/4/29)이었으며, 해방 전후의 문학을 남·북한 통합의 관점에서 살핌으로써 민족 문학사 서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문학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통일문학(畧)에 관한 논의의 토대가 된 것이기도 했다. 즉 해금은 (앞서 논의한)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전후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의 전환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를 (문학적인 차원에서) 더 강하게 추동한 정책적인 계기가 된 셈이었다.

해금은 역사 인식의 전환을 동반하고 있는 조치였기에 다소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도 했다. 이는 1988년 7월 19일의 조치가 ‘북 체제의 구축에 적극 협력했거나, 현재 현저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조영출, 백인준 5인을 제외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알려진 대로 이들은 1989년 2월 29일 추가적으로 해금된다. 또한, 선정 기준(남북/월북/재북에 대한 기준 및 8·15해방 이전이란 기점)도 모호하여, 해금 대상 작가 명단조차 제출되지 않았었다. 이는 음악·미술계 해금의 경우와도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봉범은 해금 기준 및 명단의 불명료성에 대해 (1) 월북 작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 부재 (2) 해금 세부 원칙에 대한 정부 당국 내부의 이견 (3) 행정처분상 금지조치가 없었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도 했다(이봉범 2017, 244).

하지만 해금의 과도기적이며 불완전한 성격은 ‘월북 작가’라는 호명/범주/규정의 역사 인식에서 더 구체적인 면모를 보인다. 특히 ‘월북 작가’라는 명명에는 그러한 규정에 개입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혼선(및 논쟁)이 있었다. 이 혼선이 중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해금 조치는 한편으로는 문인을 비롯한 문학 연구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학술적인 사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문학에 관한 출판시장의 변동을 야기한 상업적인 사건이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에 남북한 교류라는 정치적 의미도 포개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해금 조치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월북 작가’ 규정 문제가 문학계와 출판계, 법조계, 정치계 간의 이견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해금 이후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과 이기영의 『두만강』이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월북 작가의 유족과 출판계약을 맺은 출판사와 남한 유족의 저작권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출판사 간에 법적 시비가 맞붙게 된다. 법원은 헌법 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로 되어 있어, 북한 지역도 한반도의 일부이기에, 저작권법의 효력도 북한에 미친다’고 판결함으로써, 유족의 상속을 인정한다. 이 판결은 법학자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꽤나 이례적으로 비친 것 같다. 즉 당시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은 대부분 간첩사건 등 공안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서만 다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재산권 분쟁의 해결 근거로 취급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의 작가들은 북한예술동맹에 소속되어, 저작권이 사회 구조상 정부나 당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니까 이 판결은 하나의 ‘권리 대상-작품’을 놓고 남-

북 양쪽의 별개 법률에 의해 지지되는 두 개의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해당 작품들은 월북 이후 북에서 저술한 작품이기에, 월북 작가의 ‘미해금 작품’이었다. 그리하여 한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국가보안법 아래서 보면 이적단체의 ‘이적 표현물’을 남한의 저작권법이 보호해준 꼴이 됐다고까지 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한겨레 1989/9/1).¹²⁾

월북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판결은 ‘월북 작가’라는 규정을 둘러싼 당대 여러 주체의 시차를 상징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흔히 ‘월북 작가’라고 할 때의 ‘월북’은 ‘체제 선택의 행위(혹은 이념 지향)’이자 ‘공간적/지리적 이동’을 동시에 뜻하면서도, 대체로 전자의 규정이 후자의 규정을 잠식(?)했다면, 해금을 전후한 시기 출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둘의 의미가 서로 어긋나거나 경합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금 조치와 관련해서는 ‘월북’과 ‘납북’의 규정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자 관건이기도 했다. 알려진 대로 정지용과 김기림 등의 유족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월북’이 아니라 ‘납북’된 것임을 정부 당국에 증명해야 했다. ‘월북’이나 ‘납북’이란 호명 자체가 냉전적 사고의 소산이기에, 월북 작가 해금은 냉전적 사고에 입각한 탈냉전적 조치

12) 한편 월북작가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꼽은 1989년 출판계 10대 뉴스에 선정되기도 한다. 이는 해금 자체보다 그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출판시장에서 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 밖에 ‘판매 금지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출판사 승소’와, ‘한국-소련 간 출판 교류에 관한 합의’가 선정되어, 금지도서의 민주화와 자율화 및 사회주의권과의 교류 문제가 당대 출판계의 중요한 화두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판문화 1989/12).

였다. 역설적 사태라 할 수 있기도 하다. 동시에 출판 금지에 관한 법률적 조항이 없었던 상황에서 발표된 금지에 대한 역설적 해제이기도 했다.¹³⁾ 이는 결과적으로 '월북 작가'라는 규정은 언제나 소급적이면서도 유동적인, 그리하여 확정이 불가능한 '(내부)냉전의 표지'였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해금의 대상이 된 월북 작가의 리스트도 정부와 언론, 출판계와 연구자 간에 의견/생각/추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태는 역설적으로 출판시장에서의 전방위적인 월북 작가 작품 선집 및 전집 발간의 활황을 이끈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출판사가 경쟁적으로 관련 도서 출판에 열중케 하는 효과를 낳았고, 그만큼 대중에게도 많이 읽히게 되었다.

이처럼 해금은 정치적이면서도 역사적이고, 문화·상업적이면서도 법률적·학술적인 전환을 동반한 조치였다. 그렇기에 이는 해금 전후의 냉전 질서 및 정치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이와는 다소 어긋난 법률적 조치 및 정치 탄압이 이어지기도 했다. 해금을 전후한, 즉 1988년과 1989년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1988년 4월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4당 국면

13) 1988년 9월에는 도서출판 사계절에서 홍명희의 『임격정』출판 금지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문공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공부장관은 공식 답변에서 '판매 및 출판 금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출판자제 권유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즉 1954년 이래로 납북, 월북 작가 작품에 대해 출판 금지 처분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 박인제 변호사는 '출판 자제를 권고, 지도한 것이 실제로는 판매 및 출판 금지라는 출판 탄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지금까지의 권고가 사실상 공권력 발동에 의한 강압적인 행정조치였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한겨레 1988/9/23).

의 창출, 비록 분단올림픽이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이끈 9월의 올림픽 개최, 이어 ‘광주청문회’와 ‘5공 청문회’ 개최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바람’이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1989년에 이르러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합수부가 부활하여 대대적인 ‘좌경 척결’이 (재)시작되고,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강제진압으로 대변되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 극심해졌다. 이처럼 1987년 6월 이후일지라도, 1988년과 1989년은 상당히 상반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 해금이라는 ‘민주화의 효과’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해금이란 조치가 역사와 문화의 복원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당대 연구자들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대의 문단 및 학술계에서는 해금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변화의 계기를 실제 문학 지형의 전환이자 새로운 단계의 진입으로써 의미화하려는 담론적-이론적인 실천이 제출되기 시작한다. 항쟁 이후의 문학(론)이 모색되고 있었던 것이다.

3. 항쟁 이후의 문학(론)과 탈-냉전적 문학사 인식의 지평

1) 항쟁 이후의 문학론

해금에 대한 문단의 직접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반응은 대체로 이랬다.

월북 문인들의 작품이 해금되고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등의 소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아직도 묶여 있지만) 남한과는 스스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해외동포 문인들의 작품이 소개되어 이제 분단 이후 절름발이였던 반쪽의 한국 국문학사는 다시 써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이 당당하게 민족 문학의 유산으로서 편입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교과서와 국문학사에 올라 있는 식민지 시대의 친일 문사들과 군사독재체제의 부역 문인들의 작품을 어떻게 척결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뚜렷이 비교하게 해 줍니다(황석영 1988, 60).

해금은 (앞서 짧게 언급한 대로) 우선 월북 문인과 해외동포 문인의 복원을 통해 남한만의 반쪽 문학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며, 한반도 정세 및 분단 현실을 외부로부터 조망하면서 (‘남도 북도 내 조국이다’) 통일 지향적 정신을 확보케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졌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대 확립되어 가던 ‘통일민족의 정사’에 대한 의식이 남북한 통합 문학사 서술의 과제로 이행된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민족·반민중의 역사 청산 문제를 던져준 것이기도 했다. 주로 전자는 북한 문학에 대한 이해를 포괄한 차원에서 진행됐고, 후자는 ‘친일파’와 ‘빨치산’이라는 역사 형상의 재현 문제¹⁴⁾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특히 이들 경향

14) 이해령은 1987년 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극적으로 등장하여 요동친 역사 형상인 빨치산과 친일파 재현을 통해 한국 근대성 담론의 행방을 그려본 바가 있다. 이 두 형상은 탈식민 냉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당성에 관한 심문 속에서 등장한 형상이자 자본주의적 경제 주체로서의 근대적 주체의 극단적 한계 형상이기 때문이다(이혜령 2017).

은 당대 폭발적으로 심화된 해방전후사의 반-냉전 역사 인식에 바탕한 것임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김병익은 작금의 변화에 대해 ‘남한적 시각의 가치 체계 전반을 수정’하고, “서구적 특히 미국적 관점에 학문적 태도와 사유의 전개 기반을 두어왔던 인식구조의 편향성”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동지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로서 북한과 공산권을 대해보던 우리의 소박한 관념”을 해체하고, ‘서구의 부르주아 체제 속의 가치를 상대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김병익 1989, 304).

물론 해금 조치가 ‘(사상성을 포괄한) 폭의 제한’이 있고, ‘과거 문학, 외국 문학, 북한문학에 대해서는 다소간 금압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인의 예술 표현에 대해서는 탄압(『한라산』의 이산하, 『통일밥』의 주인공)하는 모순을 가진 한계’(이강은 1989, 370)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당대 문단에서는 대체로 해금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나름의 공감과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해금 조치 역시 6월 항쟁의 효과이자 성과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즉, 1988년의 해금 조치가 비록 단계적이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면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6월 항쟁이라는 ‘역사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단에서는 해금 조치를 전후로 하여 ‘항쟁 이후의 문학’이라는 역사적이면서도 문학사적인 인식의 틀이 본격 제출되기에 이른다. 즉 해금은 한국문학사의 어떤 전환을 인식하거나 식별해야 한다는 혹은 문학사의 전환을 예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해금의 가장 중요한 효과이자 의의는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 해금은 항쟁 이후에 쟁취한 민주화의

바람이 문학적인 차원에서 수용 및 정착된 거의 최초의 성과였다. 다음은 백낙청의 글이다.

6월항쟁 이후로, 한국문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작년 이맘때 『창작과 비평』복간호에 쓴 「오늘의 민족 문학과 민족운동」에서 처음 내놓은 주장인데, 무엇보다도 문학적·운동적 성과를 기준으로 삼은 단계 구분이었다. 큰 눈으로 보아 1980년 광주 5월 항쟁이 한 시대의 획을 이미 그은 대사건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가 전국적인 범위로 일차적인 열매나마 맺은 것이 1987년 6월 항쟁이었고 문학의 영역에서는 항쟁 이후에야 본격적인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중략)… 문제는 항쟁 이후의 실제 성과가 그 이전과 뚜렷이 구별될 만한 수준에 달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기억할 점은 문학에서의 단계 변화는 이따금씩 어떠한 작품의 출현으로 일거에 성취되는 수도 있으나, 대개는 정치사의 진전보다 더욱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백낙청 1989, 66-67).

백낙청은 6월 항쟁 이후로 한국문학이 '새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 이는 6월 항쟁이야말로 광주의 5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얻은 결실이기도, 우선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6·29선언이나 6공화국 선포를 한 뒤에도 분단체제에 굴복함이 없이 그 민중 주도성을 오히려 강화”하여 “이념 서적, 월북·재북 문학, 예술인 작품의 해금” 및 “사회주의 권·진보적 서방지식인·문학인과의 교류 확대”와 ‘정치범 석방’을 ‘민족

문학의 지평'을 넓힌 진전으로 파악하고 있다(백낙청 1989, 78-79).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항쟁 이후의 문학적 단계 변화'란 '정치사의 진전'보다 '완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다소 신중한 진단에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사의 전환이 문학의 영역에 사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소산으로 볼 수만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치적인 성과와 문학적인 성과의 관계를 사유할 필요를 제기하는 것에 가까울 것이다. 이를 토대로 백낙청은 6월 항쟁을 결정적인 전환으로 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일별한다. (1) 증산층적 시각 (2) 민족해방의 입장 (3) 계급적 관점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창비의 민족문화론 진영)의 입장을 '새 단계' 맞게 기존의 관점을 '변증법적으로 종합 코자 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천명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분단체제'에 바탕을 둔 인식의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단체제론'은 당대 민족 문학 논쟁의 다른 진영들(민중적 민족 문화론, 노동해방문화론)과 교호하면서, 사회구성체 문제 및 변혁노선까지 정리하는 역사 인식의 방법으로서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학(사)의 새 단계'는 구체적인 작품에 근거한 것이어야 했다. 그렇기에 기성 작가의 진전(고은의 『만인보』 4~6권,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논하고, 신진의 약진(정도상, 김한수, 홍희담, 김향숙 등)을 살피기도 하지만, 그 문학적 성과에 약간의 의문을 표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황석영도 (앞서 언급한) 「항쟁 이후의 문학」(1988)에서 젊은 작가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바 있기도 했다. 그러나 백낙청은 '작품의 질'을 음식에 비유하며, 그것이 몸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유보적

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유보적 입장, 그러니까 당대 문학에 대한 기성 문인의 ‘아쉬움’은 다만 작품의 수준에 대한 의심과 회의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반대로 이는 기성의 관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문학의 새로운 면모가 발견되는 순간으로 볼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해 기성 문인들의 ‘아쉬움’은 항쟁 이후의 구체적인 작품들 속에서 이전 시대의 문학과는 분명히 다른 어떤 질적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일종의 징후로서 관찰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쟁 이후의 문학’을 문학사의 ‘새 단계’를 예비하는 (또 다른) 단계로 파악하는 부류의 논의를 살펴야 할 것이다. 가령 홍정선은 항쟁 이후의 문학 변화에 대해 (1) 금기 체계의 완화에서 오는 표면적 변화 (2)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변화의 크기 강조 (3) 정치적-사회적 변화의 반영으로 그 전환의 가능성을 물으면서도, 구체적인 작품들의 한계 및 변화를 감지하려는 분석자의 욕망 투사 등의 이유를 들어 ‘새 단계’론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포소설의 소개나 해금 작가의 소설집 간행 등은 어디까지나 우리 소설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황이거나 현실이지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 소설의 변화를 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항쟁 이후의 문학사의 진전이나 전환을 다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럼에도 “6월 항쟁 이후의 소설들은 정치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휩쓰는 처지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부면에 대해 진지한 모색”(개인의 섬세한 내면에 상응하는 언어체계 구축, 노동자에 대한 낙관적 전망, 역사와 정치에 대한 반

성)을 하고 있기에, 1990년대 소설을 예비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다(홍정선 1989, 866-877).

6월 항쟁 이후의 소설이 다만 정치의 변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격동을 반영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려 그러한 격동 속에서도 쉽게 포착되지 못했던 개인의 삶-일상-내면을 재현하고 있다는 저 진단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소설의 ‘흔한’ 차이가 말해지는 방식의 선례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항쟁 이후의 소설이 정치적인 대의와 개인의 일상(과 내면)을 연결짓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일상, 항쟁과 개인의 관계를 담지하는 역사의 새로운 주체와 그러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것 역시 문학장의 민주화의 중요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이는 물론 정치적 주체의 분화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역사 인식의 중요한 전환을 반영하고 있는 사고이기도 했다. 다음의 글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1987년 6월까지의 변혁 운동은 주로 학생 운동·도시 빈민 운동·농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지식인·종교인·재야 정치인·문학 예술인들이 운동의 핵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서 1987년 6월 이후에 전개된 변혁 운동은 노동운동이 주축이 되면서 과거 지배적인 변혁 운동이었던 프티 부르주아나 중간 계급 운동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신광영 1989, 925).

6월 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변혁 운동의 주도권 문제로부터 살피고 있는 글이다. 변혁 운동의 주도권을 노동 계급이 쥐게 됐다는 이 진단에는 실제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사회사적인 문제가 함의되어 있는 것 같다. 첫째, 6월 항쟁은 분명 학생, 성직자, 지식인, 농민, 야당 정치인 등이 연합한 민주화 대투쟁이었다. 그렇다면, 6월 항쟁 때 연대한 이 주체들은 항쟁 2년 만에 변혁노선의 어느 지점으로 분산된 것일까? 그들은 한편으론 시민¹⁵⁾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속으로 묶여 들어간 것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 정치의 상상으로부터 의도적인 이탈을 감행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 다가한 주체들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쟁취 이후, 광장에서 다시 ‘일상-속-개인’으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자체는 국가의 통치성과 신자유주의적 규율이 빛을

15) 최장집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전후한 맥락 속에서 운동권 담론의 민중이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이행되는 양상에 대해 살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민중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주체와 담론이 있고, 이를 통해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 집단적인 자각과 실제적인 역사를 가지며, 그들이 운동을 통해 이루어 낸 민주화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있다고 한다. 반면 시민은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담지자이자 이를 실천할 주체인 시민의 지위와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헤게모니적 관점을 ①도덕주의 ②민족주의-국가주의 ③신자유주의로 나누어 파악한다. 이 세 관점의 결합은 보수적 민주주의관과 민중운동의 전통으로부터 전수된 진보적 민주주의관이 상호 교차하는 영역에서 지배적 관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반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강화해 급기야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의 투입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민중에서 시민으로 이행되는 맥락 안에서 표상되고 있던 정치적 주체의 여러 형상을 포착해보려 한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주체성은 정당정치로는 쉽게 환원되지 않는 것이며, 일상의 제 영역에서 확보되고 있는 주체화 양식의 설립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통해 고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최장집 2009, 204).

어떤 결과일 것이다. 아울러 이는 6월 항쟁 자체의 한계와도 연동되어 있는 문제로 파악됐다. 6월 항쟁은 독재 타도와 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나, 이는 국가 기구나 권력 형태의 질적 변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 국가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의 권력 획득 방법(군사 쿠데타)과 권력 행사 방식(독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새로이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지배 체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신광영 1989, 923-924). 그렇기에 ‘국가에 대한 상’을 전혀 다르게 모색했다기보다는 국가를 지배하는 세력의 성격 변화만을 추인했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후 6·29선언으로 사회세력과 정권과의 대립이 완화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민주화라는 연대 정치의 대의가 대의제(선거제도) 설립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됐다는 아이러니한 역사의 한 분기가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된 결과는 역으로 ‘일상의 정치’를 모색하게 한 의도치 않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운동사적 대의를 잃어, 일상 속으로 회귀했다는 논리가 아니다. 반대로 끝내 완수되지 못한 대의가 일상의 제 영역에서 ‘어떻게’ 다기한 방식으로 정착-변모되어 갔는지를 살펴야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6월 항쟁의 성과와 한계가 살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쟁 이전을 회고하는 방식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전망 모두가 일상의 영역에서 어떤 ‘경험의 기록’과 ‘감정의 편린’으로 남게 되었는지를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항쟁 이후의 문학’을 살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으며, 이는 물론 문학장의 민주화라는 제도적 성취와 그를 기반으로 둔 감정 정치의 재현 문제 모두를 아우르는 성질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둘째 시민과 노동 계급의 관계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짚어두어야 한다. 가령 이런 것이다. 6월 항쟁 직후, 노동운동의 생존권 투쟁은 정치적 민주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사회 세력들에겐 민주화 달성에 있어 장애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노동자 파업의 자제를 촉구하는 민주화 세력(중간 계급)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 계급을 ‘시민집단’이라는 상상 속에서 ‘타자화’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화 세력의 투쟁 대상은 독재 권력이었으나, 노동자 계급의 투쟁 대상은 일단 자본가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¹⁶⁾ 하지만 시민사회의 상상 바깥에서 노동자 계급이 포착될 때, 그것은 역으로 노동 계급의 독자적인 ‘사회적 몫’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노동운동 진영은 항쟁 이후의 변혁 운동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독자 세력화하기에 이른다. 당연히 표상의 차원에서도 노동자-전위의 상이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노동자 계급은 시민집단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를 아로새기면서도, 그 공통의 조건과 기반들을 표현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반 시민과는 다른 ‘변혁의 전위’여야 하

16) 이는 푸코가 ‘착취’보다는 ‘지배’의 측면에 주안을 두면서, 연합 정치의 비전을 찾았던 것과도 상통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사회세력이 ‘착취’에 대항한다면, 이는 프롤레타리아의 이념과 위치를 취한다는 것이지만, ‘권력’에 반하여 투쟁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을 바로 그들이 발견한 그 위치와 그들 자신의 능동적인 관점에서 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피박은 푸코의 이러한 사유야말로 서구 유럽의 지식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와 세계를 파악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즉 푸코는 국제적 노동 분업과 신식민주의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pivak 2010, 84-85).

면서도, 자신의 계급적 위치가 시민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 설득받아야만 했던 것이다(허민 2018).

6월 항쟁 이후의 시간은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위상과 위치가 재정립되거나 재조정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형성된 노동자 계급 인식론의 근거에는 역사의 변혁을 담당하는 주체 구성에 관한 민족·민중문학 진영의 쟁론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도 짚어져야 한다. 흔히 '민족 문학 주체 논쟁'이라고 불린 이 쟁론은 문학장의 재편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창비 진영의 민족 문학(론)은 민족 구성원의 절대다수이자, 역사 발전의 주체인 민중이 능동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때의 민중은 “어느 한 계급 또는 두어 계급”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적·계층적 구성을 지닌 광범위한 연합세력”임을 명시함으로써 (민중 지향적인) 지식인까지 포괄하는 민중 주체에 대한 상상을 정립하고 있었다(백낙청 1985, 20). 이에 대해 민중적 민족 문학론 진영에서는 “지식인들에 의한 대리 민중문학이 아닌 생산 대중의 주체적인 문학적 욕구와 그 구체적 산물들”이 민족 내부에서 분출되면서 소시민적 민족 문학론이 극복·지양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김명인 1987, 87-88). 한편 노동해방문학 진영에서는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변혁 주체관의 추상성”(민주주의 민족 문학론)을 반성하고,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제출하기도 했다(조정환 1989, 246-247). 이처럼 1980년대의 문학장을 지배하고 있던 복수의 민족·민중 문학론은 서로 다른 정치적 전망에 입각하면서도 당대의 문학적 사명을 역사 변혁의 주체와 이념을 수립하는 과제로서 수렴시키고 있었다.

항쟁 이후의 문학론이 제기되는 맥락 속에는 민족·민중문학 진영의 재편이 놓여 있었고, 이는 역사 변혁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한국 문학장의 이와 같은 재편과 분화는 우선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좌파 사상(혹은 지식)의 해방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역사 인식의 변동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구체적 조건으로 기능한 것이 바로 해금 조치였다. 물론 해금 조치에 대해 6월 항쟁 이후에 모색된 문학사의 전환을 식별케 하는 충분조건이라 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금은 정치와 문학, 운동과 일상, 노동자와 (그 밖의) 시민, 정치적 주체와 비 주체 간의 오랜 경계가 해소되고 있던 사회사적인 지평을 제도적으로 담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성취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해금은 단지 규제 완화의 의미만이 아니라, 운동과 문학이 일상적 차원에서 규합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각의 열림을 뜻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해금 이후에서야 문학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문학사 서술의 과제가 본격 수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봐도 그렇다. 해금은 한국문학의 역사 속에서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다시 사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로 작동했다. 이는 6월 항쟁 이전까지, 그리하여 해금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서술할 수 없었던 한국문학의 유산들을 복원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졌다는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와 문학을 연결 짓고 있었던 경향소설과 프로문학(노동문학), 즉 사회주의 문학·문학론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여기에 북한문학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한국 근대 문학사 서술이 당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금은 당대의 문학사 인식의

전환을 식별케 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게 전환된 역사 인식을 실제 서술 가능케 했던 물적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마르크스와 북한의 역사화: 탈-냉전적 문학사 인식의 지평

김윤식은 일본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 자격으로 부임했던 당시(1970), 루카치의 저술을 손에 들면서 느낀 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그가 느낀 감격 속에는 해금 이전 시대 문학장의 풍모가 새겨져 있기도 하다.

(그 책은) 루흐터한트사에서 1961년에 초판 된 제3판(1968년)이었다. ... 586쪽의 이 책을 두말없이 정가대로 지불하고, 누가 볼세라 한 걸음으로 내 방으로 달려왔음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누가 볼세라, 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의 공무원 신분인 내게 있어 앞뒤를 가로막는 것이 이른바 지엄한 반공법이었다. 『자본론』을 비롯한 마르크스의 저작이란 금서 중의 금서였다. 가장 학문적인 저서 중의 하나인 『자본론』이 금서로 된 지적 풍토에서 어떤 학문이 가능했던가. 『역사와 계급의식』(1923) 이후 공산당에 입당한 루카치인 만큼 그의 문학론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다. 이른바 속수무책이라고나 할까. 헤겔이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춰라”라고 말했거니와, 반공법 아래의 학문이란 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학문이란 가능한 것일까. 이런 물음이야말로 식민지 사관 극복을 지상목표로 한 나를 포함한 전후 세대

연구진을 절망케 한 것이 따로 없었다. 동시에 바로 이 사실이 불타는 열정의 근거이자 진전해 갈 에너지를 얻어 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다 (김윤식 2012, 39-40).

루카치 저술을 손에 들며 누군가 볼세라 감추어야만 했던 연구자에게 학문이란, 문학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자본론』이 금서였던 지적 풍토 속에서 반공을 국시로 한 나라의 공무원 신분으로 어떤 연구가 가능했을까? 주지하다시피 한국에서 루카치의 주요 저서들은 1970~80년대 금서로 지정되었기에, 당시를 살아가던 학생들과 연구자들은 해외 원서와 해적판을 통해서만 이 책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루카치의 저술을 구매한 김윤식을 비롯한 전후 세대의 절망은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를테면 ‘가장 학문적인 저서’인 『자본론』을 몇몇이 읽을 수 없었던, 세계의 지적·사상적·이론적 유산의 절반을 포기해야 했던 ‘불구의 학문’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김윤식의 회고에는 금지된 앎을 대면한 자의 당혹감이 여러 곳에서 토로되고 있다. “도쿄대학 구내 학생 운영 상점에서 북한산 별꼴을 대면했을 때의 당혹감”, “서점마다 넘쳐나는 마르크스주의 책들과 또한 나란히 한 이에 대한 혹독한 비판서들을 대할 때의 당혹감”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회고에는 “북한 서적이 판매되는 고려서점에 감히 들르지도 못했던” 시대의 벽 앞에 바짝 엎드리고 말았던 한국 지식인의 강제된 고백으로 점철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 체제와 반공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학문을 언제나

반쪽짜리로, '결여된 상태'로 현상케 하는 일종의 기율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당연히도 역사 서술의 시각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한국문학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를테면 1956년에 저술된 조연현의 『한국문학사』는 일제 파시즘의 억압 아래에서 탈정치화된 문학 규범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순수문학론'에 입각하여 쓰인 것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한 작가와 작품을 서술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그 실상과 의의를 축소 또는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는 냉전체제가 고착되기 전인 8·15 직후에 나온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7)보다 오히려 퇴행한 형국이었다. 백철의 문학사는 서구 문예 사조의 '수입사'에 머물러 버린 분명한 한계가 있는 저술이었지만, 적어도 1920~30년대 초반까지 조선 문단의 주류라 할 수 있었던 프로문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한국문학사의 의도된 망각과 왜곡은 1960년대 조운제의 문학사 서술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의 전략은 두말할 것 없이 우선 기성 문단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개혁지를 발판으로 하여 여기서 부지런히 화살을 쏘아 기성 문단에 맹격을 가하고 또 때로는 도전을 감행하여 적어도 무산계급의 현실적 이익을 획득하는 목적이 아닌 일질의 문학적 경향은 이것을 무가치한 감상적 예술지상주의적 문학이라 몰아 때리고 계급투쟁적이 아닌 민족주의적인 문학에 대하여는 국수주의니 보수주의니 정신주의니 하는 말로서 아낌없이 매도하여 문단을 온통 위축케 하였다. ... (중략) ...

프로문학이란 것은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공연히 선동

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으며, 또 어디까지나 투쟁적이어서 문단이 시
끄러웠으나, 그러나 실제로 작품 활동에 있어서는 보잘 것이 없었다(조운
제 1968, 546-547).

이처럼 프로문학은 조선 문단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선동 문학
으로서 제한된 의미만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것도 정치 운동과 사상투쟁
에만 매몰되어, 실제 작품은 그야말로 ‘보잘 것이 없는 것’으로 싸잡아서
평가 절하되고 있다. 냉전질서의 고착과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주
의의 심화는 한국문학사 자체를 ‘불구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렇다
면 1970년대 김윤식의 문학사 저술은 어떠했을까? 한때 식민 본국이자
(구)제국이었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마르크스주의 서적과 북한 서점 앞
에서 망설이던 그의 역사 인식은 과연 어떠한 문학사를 기술케 했을까?

김윤식과 김현이 함께 쓴 『한국문학사』(1973)는 우선 식민사관의 극복
에 초점이 맞추어진 저작이었다. 이 책은 당시 국사학계가 내재적 발전
론에 입각하여 제기한 자본주의 맹아론에 힘입어, 역시 그 이전의 아시
아적 정체성론에 침윤되어 있었던 한국 근대문학사론에 일대 비판을 가
하면서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대로까지 잡고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저작조차 타율적으로 서술 대상에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물론 그 강제된 위력 앞에서 저자들은 나름의 우회 전략을 제
시하고 있기도 했다. 이 우회 전략은 시대와의 타협이기도 했으나, 과거
배제되거나 왜곡되어 있던 좌파 문학의 제한적 복권이라는 측면에서는
평가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한국문학사』에서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프로문학이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한 형태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의 발견”이란 명목하에, 쉽게 언급되거나 의미화될 수 없었던 프로문인이나 작품들이 (제한적이거나) 소환되어 있기도 하다. 이를테면, 신경향파 작가를 대표하는 최서해가 염상섭과 김동인, 현진건과 나란히 배치되어, 그 특유의 빈곤 묘사와 ‘붉은색(피)’ 이미지의 의미가 논해지고, 이러한 소설의 문법이 “1920년대 프로 작가들의 한 유행 수법”이 되었다는 방식으로 계보화되고 있다(김윤식·김현 1973, 261). 또한, 카프의 서기장이었던 임화의 문학사적 궤적을 통해, 카프의 역사가 대리 서술되기도 한다. 김윤식은 1920년대 식민지 지식인은 “아(亞)서구적 내지 일본적인 것으로서의 지적 호기심에 무방비 상태로 개방되어 있었다”(김윤식·김현 1973, 267)는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임화가 다다이즘 등의 전위예술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간 경위를 추적하는데, 이 과정에서 카프 방향전환의 성격 및 세대 교체의 의미, 나프(NAPF)와의 관계와 일제에 의한 카프의 몰락 등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문인을 대표하는 임화의 문학사적 궤적을 통해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엄존했던 사회주의 문학의 역사와 한계가 아울러 살피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한국문학사』에서는 좌파 문학의 복원을 사상적인 수준에서 이뤄 내지는 못했으나, 당대 식민지 조선에서 형성되고 있던 근대문학이라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변증법적 고찰이자 종합으로서 좌파 문인들의 작품을 위치케 하고 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를 사상이자 이념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이념이 실제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던, 다시 말해 사회주의에 대한 일종의 기능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근대적 기능(혹은 기획)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민족이란 집단적 구심으로 온전히 환원되지는 않으면서도, 나름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기에, 서술 불가능했던 좌파 문학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는 우회적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김윤식이 김현과 함께 『한국문학사』를 출간하던 때는 그가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1973)를 출간하던 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는 프로문학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 문예비평을 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저작인데, 이는 그 자체로 한국 근대 문학 연구자가 프로문학을 다룰 수 있었던 해금 이전 시대 저술의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저작의 사적 고찰 대상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 비평에 한정된 것이었고, 그렇기에 이는 연구 목적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틀 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학술적 성과였다. 문학사는 그야말로 문학의 역사이기에 작품에 내재한 사상과 정서를 포위하고 있는 사관에 근본적으로 입각할 수밖에 없다면, 비평사는 보다 과학적인 인식을 토대로 한다는 다분히 학술적인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는 김윤식의 문학사관과 연동된 결과이기도 한데, 그에 따르면 “문학사는 역사와는 엄연히 다른 감정적 차원에서 서술”되어야 하며, “문학적 집적물은 반드시 감동과 향유라는 정서적 반응을 요구”하기에 “정서적 차원이 배제된 문학사란 문서 기록이나 고증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감동과 향유라는 정서적 층위를 함의해야 하는 문학사 서술이, 바로 그러한 문학적 향유의 절반을 포기해야만 했던 시대에, 어떻게 학술과 과학의 이름으로

계보화되거나 역사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작이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김윤식은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프로문학에 대한 민족주의의 대타의식을 발견한 것 같다. 프로문학과 민족주의 문학 사이의 대타의식은 주체와 타자의 의식구조로 비평사를 쓸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이 되었다(장문석 2013, 615-628). 이는 한편으로는 프로문학의 타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민족 문학의 내실에 대한 의문에 바탕을 둔 것이면서도,¹⁸⁾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문학의 문학사적 위상을 정립하는 역사 기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한국문학사』에서는 프로문학이 독자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저술이었고, 김윤식은 해금 이후 『한국소설사』(1993)를 새로 집필하며, 과거 자신이 쓴 문학사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한다. 다음은 『한국소설사』의 서문 일부이다.

둘째 그동안의 소설사 기술에서 거의 배제되었던 경향(프로)소설을 우리 소설사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 정당한 위상을 정립하고자 했다. 1920년대 중반 무렵 떠올라 해방 공간까지 펼쳐졌던 경향소설은 우리 소설사의 주류 중 하나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7) 그런 의미에서 『한국문학사』의 “방법론 비판”에서의 이러한 서술은 더욱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정서적 차원이 배제된 문학사) 그것은 박사 학위 취득자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문학사가의 흥미를 끌 수는 없다.”(김윤식·김현 1973, 15)
18) 하지만 그럼에도 김윤식은 민족 문학의 고유한 역사를 탐색하려 했고, 이를 통해 이식문학론과 전통단절론을 이론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최병구 2014).

셋째, 해방 이후의 북한소설을 우리 소설사의 큰 흐름 속에 포괄해야 한다는 당위에 부응하고자 했다.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 소설사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통일된 미래를 앞서 준비해야 하는 우리 시대의 지적 과제인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월북 작가들이 북한 사회에서 남긴 작품들을 남한문학사와 병행하여 한자리에 견주하고자 했다(김윤식·정호응 1993, 7-8).

“소설사 기술에서 거의 배제되었던 경향(프로)소설을 우리 소설사의 한 복판”으로 정립 가능케 한 직접적인 성과는 분명 해금에 있었다. 해금은 문학에 대한 단순한 제재 완화의 의미만을 가진 제도적인 성과가 아니라, 그 전후 시기에 형성되고 있던 역사 인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비로소 온전히 확보케 하는 민주적 성취였다. 이때 역사 인식의 가능성이란 물론 탈-냉전적 지평의 확보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프로소설과 더불어 북한문학 역시도 포괄할 수 있는 문학사 서술이 필요했다. 이는 상술한 대로 ‘통일 민족의 정사’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남북한 통합·통일 문학사 서술의 과제로 이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소설사』에서는 통일 문학사 구축을 위해 역으로 남북의 문학사적 분기의 기원을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남·북한 문학의 병행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윤식은 1946년 3월 23일에 수행된 토지개혁으로부터 북한의 독자적인 소설사가 시작된다고 논의한다. 나아가 북한문학사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개괄하는데, 해방에서 주체 문예론의 대두 전까지 약 20년을 하나로 묶고, 주체 문예론 이후의 시기를 또 하나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자의 시기에는

카프의 정통성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표방되었다면, 이후 시기에는 항일혁명 문학을 근간으로 김일성 창작의 가극화가 진행되었다는 논의였다(김윤식·정효웅 1993, 520). 북한소설사가 한국소설사로 호명되며, 역사 서술의 독립된 장으로서 포함되었다는 것은 탈냉전적 한반도 인식의 가능성이 문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지지되거나 모색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해금은 결국 마르크스와 북한이라는 남한 역사의 오랜 타자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해금은 그 전후 시기에 형성되고 있던 탈-냉전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쟁취된 성과이자, 통일 민족에 대한 상상의 현실적 준거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해금 이후 (당시의) 소장학자들은 문학사 인식의 세대론을 내세우며, 보다 진보적 입장에서 역사 서술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¹⁹⁾ 진보와 통일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학사적 과제가 해금이란 사건 속에서 제도화의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조건이란 것이 모두의 기대보다 강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19) 그 대표적인 성과가 하정일, 김재용, 오성호, 이상경이 공동집필한 『한국 근대 민족문학사』(한길사, 1993)일 것이다. 이들은 1980년대의 진보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이후 해방 직전까지의 한국 근대문학의 흐름을 일관되게 서술하여, 이를 통해 분단의 극복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당시 한 저널리즘에서는 이들의 진보적 역사 서술을 ‘젊은 시각’이라는 세대론적 관점에서 호명하며, 신진학자의 새로운 성취로 의미화하기도 했지만, 이 글에서 살핀 대로, 냉전과 분단 극복의 역사 인식은 이미 이전부터 형성되고 있었고, 해금은 바로 그러한 역사 인식을 현실(혹은 제도) 속에 안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성취였다는 것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한겨레 1993/12/15).

4. 결론을 대신하며

이 글은 ‘해금(1988)’이라는 조치를 문학장의 민주화라는 역사적이면서도 문화사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 작업이었다. 문학장의 민주화란 제도적인 성과이면서도 그를 바탕으로 소설의 형식과 내용의 변혁이 가능하다는 전망 속에서 쟁취되거나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항쟁 이후라는 시간의 중층적 성격과 그 사건성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해금을 일종의 필요조건으로 하여 모색될 수 있었던 항쟁 이후의 문학(畵)을 살피기도 했다. 항쟁 이후의 문학(畵)은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소설에 대한 여러 전망과 기대를 양산했고, 이는 민족·민중문학 진영의 재편과 연동되며, 역사 변혁의 주체에 대한 당대적 인식의 분화를 함의하고 있기도 했다. 또한, 항쟁을 전후하여 형성되고 있던 역사 인식이 과거 냉전 논리에 함몰된 반쪽짜리 문학사의 한계를 드러내며, 해금 조치로 인해 가능해진 새로운 탈냉전적 문학사 인식의 지평을 김윤식이라는 문학사가의 작업을 통해 살피기도 했다.

분명 해금은 마르크스주의 서적(출판)의 붐, 대학 교양 교육의 변동, 검열과 문화정치의 가시화 등을 전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 또한, 해금 전후 시기의 냉전 이데올로기의 해체 및 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의 전환, 한반도 정치 지형의 변화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체제가 끝나지 않았기에 보수연합의 책동은 늘 가능한 상태였고, 공안 통치라는 정치적 굴레로부터도

크게 자유롭지 않았던 제도의 산물이기도 했다. ‘월북 작가’라는 신분과 그들의 문학 역시 결코 짧지 않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도한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문학장의 민주화라는 성취도, ‘문학장의 자유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언제든 불릴 위기 속에 있었고, 검열 체제의 완화와 그로 인해 가능해진 소설의 변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망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는 소련의 붕괴라는 국제 질서의 재편과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변혁과 일상의 괴리가 전면화된 1991년 5월의 좌절이 있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사회의등장이 문학 자본주의의 심화와 맞물리며, 시민사회 특유의 저항성이 문학의 대중적 분화에 상응하기 시작하는 초기의 국면에 자리하고 있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 글은 항쟁 이후의 시간이 문학적 주체들에 의해 한국문학을 변화시킨 ‘역사의 분기’로서 의식적으로 파악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 전환기(1987~1991)의 구체적 실상을 살피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을 짚어두고자 한다. 분명 해금을 전후한 시기 혹은 항쟁 이후에 모색되고 있던 문학의 새로운 지평은 여기서 논해지고 있는 (지배적) 언설들로만은 온전히 해명될 수 없을 것이다. 항쟁 이후라는 시간의 중층적 성격을 논하기 위해선 서발턴의 글쓰기와 노동(자) 문학의 약진, 시민사회의 출현 등의 연쇄적 의미·효과가 섬세하게 아울러 살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의 전제로서 미리 파악되어야 할 사실과 역사들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이자 준비였음을 밝히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1~~

참고문헌

- 강원택 외. 2017. “[좌담] 6월 항쟁 30주년, ‘87년 체제’를 평가한다.” 『역사비평』 119.
- 김명인. 1987.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문학예술운동』 1. 62-109.
- 김병익. 1989. “80년대: 인식 변화의 가능성을 향하여.” 『문학과 사회』 2. 1294-1309.
- 김윤식. 2012. 『내가 읽고 만난 일본』. 그린비.
- 김윤식·김현. 1973. 『한국문학사』. 민음사.
- 김윤식·정호응. 1993.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 박명립. 1989. 『해방전후사의 인식(6)』. 한길사.
- 박완서. 1989.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창작과 비평』 17. 149-171.
- 백낙청. 1985. “민중·민족 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 비평』 부정기 간행물 1호 (통권 57호). 7-39.
- _____. 1988. “오늘의 민족 문학과 민족운동.” 『창작과 비평』. 통권59호. 221-240.
- _____. 1989. “통일 운동과 문학.” 『창작과 비평』 17. 63-92.
- 성민엽. 1988. “전환기의 문학과 사회.” 『문학과 사회』 1. 18-32.
- 신광영. 1989. “6월 항쟁과 그 이후의 사회 변혁 운동.” 『문학과 사회』 2. 920-936.
- 이강은. 1989. “현 단계 문예동향.” 『실천문학』 363-380.
- 이두영. 2015. 『현대한국출판사(1945~2010)』. 문예출판사.
- 이봉범. 2017. “냉전과 월북, (남)월북의제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37. 229-294.
- 이선미. 2014. “박완서 소설의 ‘공모’의식과 마음의 정치.” 『반교어문연구』 37. 371-400.

- 이철호. 2018. “해금 이후, 90년대 학술장의 변동.” 『구보학보』 19. 9-37.
- 이혜령. 2017. “빨치산과 친일파-어떤 역사 형상의 종언과 미래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0. 445-475.
- 장문석. 2013.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묻다.” 『한국현대문학연구』 41. 605-661.
- _____. 2018. “월북작가의 해금과 작품집 출판(1).” 『구보학보』 19. 39-111.
- 장성규. 2014. “수행성의 미학을 위한 텍스트 전략들-〈노동해방문학〉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44. 631-653.
- _____. 2018. “민중적 민족문학론의 전개와 문화예술 주체의 문제: 『문학예술운동』과 『사상문예운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52. 61-105.
- 조운제. 1968. 『한국문학사』. 탐구당.
- 조정환. 1989. “민주주의민족문학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학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 창간호. 240-267.
- 최병규. 2014. “한국문학사 서술의 경과: 제도와 이념에의 결박과 성찰-현대문학사서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6. 9-40.
- 최원식 외. 1988.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창작과비평』 59. 6-56.
- 최장집. 2009.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돌베개.
- 최장집 외. 1988. “오늘의 정치현실과 문학.” 『실천문학』 9. 258-296.
- _____. 1989.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 최장집·정해구. 1989.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 하정일 외. 1993. 『한국 근대 민족 문학사』. 한길사.
- 허민. 2018. “『노동해방문학』과 노동 재현의 규율.” 『상허학보』 52. 107-144.
- 홍정선. 1989. “6월 항쟁 이후의 현실과 소설.” 『문학과 사회』 2. 866-877.
- 황석영. 1988. “항쟁 이후의 문학.” 『창작과 비평』 16. 50-76.
- Spivak, Gayatri Ghakravorty. 2010. *Can the Subaltern Speak?* Columbia University Press.

Abstract

June Democracy Uprising and Literary Democratization

Historical Awareness before and after De-prohibition and Literary
Theory after June Democracy Uprising

Heo, Min

Sungkyunkwan University, Ph.D. Cou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character of 'De-prohibition (1988)'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istory context of 'literary democratization'. 'Literary democratization' refers to both deregulation on systematic level and expansion of awareness, sentiment, and expectation horizon toward literature. Specifically, the former can be represented as de-prohibition and abolition of censorship, liberalization of publication, republication of literary magazines, and so on and the latter refers to the possibility of revolution which can be discovered in forms and contents of novels. Of course, the systematic achievement of 'literary democratization' became the basis of liberation and expansion on forms and contents of novels. In that sense, De-prohibition was the occasion that revived banned works and writers and an incident which reminded of the fact that rebellious political character of literature encompassed in banned books has to be secured again. De-prohibition was the measure with middle-class traits reflecting conversion of historical awareness toward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ideology, North Korea, and the issue of Korean unification, transformation of political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 on. However, De-prohibition could not be a sufficient condition for recovery of history and literature. In other words, limitations did exist. Nonetheless, literary people of the time carried out discourse-theoretical practices aiming for signification by having this transformation occasion as the conversion of actual literary landscape and access to a new stage. That is none other than the literary theory after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The literary theory after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was a conscious argument and discussion of the literary circle of the time which tried to regard the systematic accomplishment of literary democratization as the opportunity of revolution of novels and reorganization of literary world. In that sense, this study tried to capture the point where De-prohibition is connected to 'the literary theory after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This is to clarify that this study explored the middle-class character of 'after the June Democracy Uprising' and the reorganization aspect of the literary world which had been pursued in that process.

■ **Keywords:** June Democracy Uprising, The 1987 Great Labour Struggle, De-prohibition, Literary Democratization, Literary Theory after June Democracy Uprising

투고 : 2019/10/01 심사 : 2019/10/16 확정 : 2019/11/10